

국내 상표 출원만으로 해외출원 동시에 효과

오는 4월부터 국내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면 전세계에 상표를 출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한 기탁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한 대통령 비준 등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출원인이 특허청에 영어로 된 국제 상표출원만 제출하면 의정서 회원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출원인이 출원을 받기 원하는 나라의 특허기관에 일일이 출원서를 내야 하는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조약이다.

마드리드 의정서에는 현재 56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기탁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우리나라는 오는 4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을 받게 된다.

출처: 한겨레신문

특허시스템 어떤 서비스 있나

“몇년 전만해도 출원 등 특허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 교통비, 인건비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하고 난 뒤 이 비용은 모두 아낄 수 있지요. 연간 약 3000억원을 절약하고 있다면 말 다한 것 아닌가요?”

최종인 정보기획담당관실 서기관은 수치로 전자정부 효과를 명쾌히 설명한다. 특허청은 99년 인터넷으로 특허행정을 처리하는 특허넷 시스템(KIPOnet, www.kipo.go.kr)을 완성했다.

96년 318억원 개발비를 들여 3년만에 이뤄냈다. 신청에서 심사, 발송까지 한번에 처리된다.

단순한 온라인 출원에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다다랐다.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출원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밖에 없다”고 최 서기관은 말한다.

특허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럿 있다.

무엇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해서다. 91년에 12만건이던 출원건수가 95년 24만건으로, 2001년에는 29만건으로 뛰었다.

서류만해도 1000만쪽 가까이 된다.

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는 과거 기술자료 검색도 한계에 이르렀다.

특허청이 보유한 기술문건은 2002년 6만7000가지 기술분야에 8500만건에 이른다.

이를 트럭에 실으면 8톤 트럭 600대 분량이나 된다. 이쯤 되니 “종이”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허넷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특허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현재 인터넷 출원은 전체 출원 29만건 가운데 24만건으로 80%가 넘는다.

예전에는 민원처리과정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그러나 인터넷 출원 뒤 모든 심사절차가 공개되고 이동전화를 통해 통지된다.

이밖에 전세계 과학기술문헌 8500만건을 데이터로 저장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민원인들도 인터넷출원이 훨씬 편

리하다. 이동하는 번잡함도 없고, 서면출원보다 수수료가 싸다.

예를 들어 100쪽짜리 특허출원서를 낸다고 할 때 서면 출원요금이 31만1000원인 반면 인터넷 출원은 10만9000원으로 20만2000원이나 아낄 수 있다.

출처 매경ECONOMY

특허공개번호체계 국제표준 채택

특허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정보기술상설 위원회 표준·문서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특허공개번호체계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0자리(연도표시 4자리, 일련번호 6자리)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각국 특허청이 결정토록 돼있는 특허공개번호 표준이 국내 특허공개번호체계와 같은 식별자(권리구분) 코드 2자리, 연도표시 4자리, 일련번호 7자리 등 총 13자리로 변경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특허청이 제안한 상표 관련 WIPO 표준 제·개정 요청안이 수용돼 우리나라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반의 책임국가로

승인됐다.

각국 대표가 참여하는 작업반은 내년 1월 20일까지 진용을 갖추고 9월까지 각국의 상표 관련 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표문서의 식별을 위한 공개번호 부여방법 등에 대한 규격 및 전자 처리를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 12월 열릴 예정인 표준·문서실무그룹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특허공개번호체계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상표 관련 표준 제·개정 작업반의 책임국가로 승인된 것은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해온 지식재산권 행정 정보화 협력사업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WIPO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한국 특허출원건수 세계 3위

우리나라는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 특허청이 발표한 출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4만5416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 출

원건수 기준으로 일본(44만7981건), 미국(32만4211건)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 179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출원통계에서 중국(14만2926건)이 4위를, 독일(8만4377건)이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출원건수는 지난 2000년(13만9173건)에 비해 4.5%가 증가한 것으로 IMF 시기인 1998년(10만4084건)에 비해서도 40%가 증가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상

표, 의장 등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28만9420건으로 일본(61만1159건), 미국(57만5786건), 중국(47만3990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특허청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특허권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널리 확산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특허·실용신안 등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내외경제

특허-사업화연계 ‘부국 밑거름’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의 국내·외 특허 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허출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의 사업화는 아직까지 미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출원된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국내특허 건수는 28만9,000여건으로 세계 5위권이다.

국제특허 출원도 2,318건으로 2000년 11위에서 지난해 8위로 뛰어올랐다.

특허심사능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우리나라 특허청을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 특허심사능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특허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허청이 최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특허보유 기업과 개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가 제품으로 개발·생산돼 출시되는 사업화 비율은 26.65%에 그쳤다.

그나마 개인은 17.93%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1.93%, 중소기업이 59.31%로 중소기업의 사업화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한 실용신안권의 사업화 비율은 41.0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기업의 실용신안권 사업화 비율이 43.48%로 개인(19.43%)보다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경쟁자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특허출원이 많아 특허를 반드시 사업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정에서 얻은 여러 응용기술을 함께 보호받기 위해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업체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특허가 전체의 70%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사 제품 보호역할을 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어 사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다. 훌륭한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도 자금이나 노하우가 없어 써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금이나 경영능력이 없으면 서로 자신이 특허권을 갖는 데에 집착해 사업화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리서치 조사 결과,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매매)한 경우는 0.40%에 불과했다.

기업은 방어적 특허가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도 4.48%에 그쳐 특허 이전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사업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37.85%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 및 영업능력(19.52%), 위조 및 모방상품(15.44%), 기술 및 연구인력(11.35%), 과도한 심사기간(10.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를 사업화해서 성공한 비율도 11.01%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성공률이 37.02%인데 비해 대기업은 7.12%, 개인은 7.02%에 머물렀다.

최종협 특허청 발명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출처 한국일보

건설기계업체들, 첨단기술개발로 제도약을!

IMF사태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었던 국내 주요 건설기계업체들의 출원이 2000년을 저점으로 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건설중장비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 국내 주요 건설기계업체들의 총 출원종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제어기술을 포함한 유압제어기술분야의 출원비중이 '97년 23%에서 '01년 71%를 차지할 정도로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업성과 운전조작성능을 향상시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외국업체들과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투자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건설기계의 호황이 계속되고 중국이 서부대개발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건설에 나서면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중장비들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IMF사태로 인해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을 마친 대우중합기계, 불보건설기계코리아, 현대중공업등 국내 주요 건설기계업체가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건설기계업체들의 총 출원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95년 132건, '96년 81건, '97년 151건, '98년

83건, '99년 28건, '00년 22건, '01년 49건으로 1997년 12월 IMF사태 후 1998년은 그 이전에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출원이 이루어져 출원량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으나 1999년과 2000년은 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구개발이 우선순위에 밀려 출원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출원건수에 있어 회복세를 나타낸다.

이를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건설기계와 관련된 출원은 크게 3가지 기술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버켓구조 및 버켓과 아암의 연결구조에 관한 것이고, 둘째, 건설기계의 프레임과 운전실의 구조에 관한 것이고, 셋째, 유압회로의 구성 및 유압제어에 관한 것이며 IMF사태이전인 '97년까지는 버켓구조 및 버켓과 아암의 연결구조에 관한 출원이 건설기계관련 출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졌으나 IMF사태이후인 '98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95년 33%, '96년 47%, '97년 39% → '98년 19%, '99년 7%, '00년 18%, '01년 12%) IMF사태이후인 98년 이후에는 유압회로의 구성 및 유압제어에 관한 출원이 건설기계관련 출원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년 36%, '96년 28%, '97년 23% → '98년 49%, '99년 50%, '00년 45%, '01년

71%)

이와 같은 추세는 각 업체들이 IMF사태이후 기술력 없이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상대적으로 개량하기는 쉬우나 개발후 기술경쟁력을 얻기 힘든 버켓의 형상이나 아암의 연결구조에 관한 기술개발보다는 외국업체들과의 기술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설기계분야의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세인 작업 성능과 운전시 조작의 편의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유압제어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건설기계업체들의 주 수출품을 다른 외국업체의 장비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국내 주요 건설기계업체들의 품질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다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 업체들의 주요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분야는 많이 남아 있는 편이며 건설기계분야의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세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주요 건설기계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압제어 및 자동화기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앞으로도 유압제어 및 자동화기술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PCT 국제공개응번역문 우선일부터 14개월내 제출해야

세 계 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관장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제31차 총회(2002. 9. 23~10.

1, 제네바)에서는 PCT 규칙(PCT Regulations)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내용 중 특히 내국인 출원인이나 특허출원

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PCT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 변경』이다. 현재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이 2003년 1월 1일 출원분부터는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02년 1월 1일자 선출원을 우선일로 하여 2003년 1월 1일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2003년 3월 1일까지 국제공개용번역문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국제공개용번역문 접수처가 국제조사기관에서 수리관청으로 변경』 되고, 우선일로부터 14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번역문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2003년 1월 출원분부터는 특허청에서 『보정명령』

을 하여 우선일부터 16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가산료(국제출원기본료의 50%, 약 26만5천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청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6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국제공개용번역문의 90% 이상이 14월이 지나 제출되고 있으므로 2003년 1월 1일 출원분부터는 위 개정내용을 준수하여 국제출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소중한 권리를 본의 아니게 잃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국 출원인 및 대리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허청

특허관련 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특허청은 특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해 며칠이 걸렸으나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출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이용은행이 전은행으로 확대되고 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해 심판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에 따라 20개월, 30개월로 다르게 적용되던 국제특허 출원시 국내 서면 제출기간을 내년 3월부터 30개월로 통일하고 5월부터는 등록료의 일부만 납부하더라도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등록료 납부 보전기회도 주어진다.

이밖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